

# 중 국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8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 의견 .....	13

## I. 일반개황

면적	9,597천 km <sup>2</sup>	GDP	11.9조 달러('17년)
인구	13.9억 명('17년)	1인당 GDP	8,583 달러('17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元 (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6.76 ('17년 평균)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약 14억 명의 인구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수출·투자 주도형 경제정책을 통해,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약 7.6%의 경제성장을 시현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과도한 기업부채, 지역 간 불균형 및 부동산 버블붕괴 우려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바, 균형 발전 및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핵심 과제임.
- 2018년 집권 2기를 시작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였으며, 경제정책 방향은 질적 성장을 통한 '샤오캉(小康)사회 실현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 추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라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등 경제 패권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단위 : %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제성장률	7.3	6.9	6.7	6.9	6.5
소비자물가상승률	2.0	1.4	2.0	1.6	2.4
재정수지 / GDP	-0.9	-2.8	-3.7	-3.7	-3.7

자료: IMF, 중국 국가통계국

#### □ 내수·서비스 중심의 질적 성장 전략으로 2018년 6.5% 성장 전망

- 중국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1%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등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지난 5년간 GDP 증가 규모(28조 6,755억 위안)는 2012년 GDP의 53.1%에 해당하는 수준임.
- 2017년에는 내수·서비스 중심의 균형성장 추진, 경착륙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등에 힘입어 6.9% 성장을 시현함. 2018년에는 투자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나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의 증가세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6%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이다.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 등으로 2%대 회복 예상

-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부동산 및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2016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대로 상승하였으나, 식료품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하락하였음.

#### □ 질적 성장을 위한 사회보장 등 정부지출 증가로 재정적자 지속 전망

-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경제의 경착륙 방지 및 중속성장 달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로 2012년 이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2018년에도 민생보장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7년\*(-3.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는 2017년에도 사회보장·취업 관련 2.5조 위안(전년대비 16% 증가), 교육 관련 3조 위안(전년대비 7.8% 증가) 등 민생 관련 지출을 확대하였음.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경제성장을 위한 과도한 기업부채에 따른 리스크 증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차입을 확대함에 따라 기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7년 GDP 대비 96.8%에서 2017년 3분기 기준 162.5%까지 증가함.

\*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140.7%(’13), 149.9(’14), 162.7(’15), 166.4%(’16), 162.5%(’17.3Q)

- 국유기업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해 2016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일본(103%), 미국(73%), 독일(54%)에 비해서도 과도한 수준으로 절대·상대적 위험도가 모두 높은 수준임.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부실기업에 대한 대규모 출자전환,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정책을 추진 중임.

#### □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버블 형성 및 붕괴 우려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 2016년 전국의 신규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11.3% 상승하였고, 상승폭도 전년대비 2.2% 증가함.

-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016년 7.4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 도시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상위 5개 도시는 20배를 상회하며, 35개 주요 도시 중 9개 도시만이 전년대비 비율이 하락하였음.

\* 중국에서는 6~7 사이를 합리적인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음.

- 2017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신규주택가격은 70개 도시 중 61개 도시가 상승하였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주요 도시 소재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 제한 및 일정기간 양도 금지 등의 통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음.

## □ 지역 간 경제 불균형 존재

- 1980년대 이후 개혁·개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접근성이 우수한 동부 연안지역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었는바,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대개발, 창장경제벨트 등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나, 경제발전은 여전히 동부지역에 편중된 상황임.
- 중국 도시경쟁력연구회가 경제·사회·환경·문화 영역별 경쟁력을 분석하여 발표한 ‘2017년 도시종합경쟁력 상위 10개\* 도시’의 대부분은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 상하이, 홍콩, 선전, 베이징, 광저우, 충칭, 톈진, 수저우, 항저우, 난징
- 2016년 기준 톈진·베이징·상하이·톈진의 1인당 GDP는 약 17,000달러를 상회하는 반면, 약 5,000달러 수준에 불과한 구이저우·윈난·간쑤 등 서부 내륙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됨.
- 2016년 기준 중국 지니계수는 0.465로 2012년(0.474)에 비해 소폭 하락 하였으나, 여전히 위험수준인 0.4를 상회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의 구매력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 성장 기대

- 14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인구 보유와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특히 최근 20~30대 젊은 소비계층이 중국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3~5선 도시의 도시화율\*\* 확대에 따라 민간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음.
- \* (1인당 국민소득) 4,524달러('10년) → 7,081달러('13년) → 8,583달러('17년)
- \*\* 도시화율(실거주 인구 기준) : 50.3%('10년) → 58.5%('17년) → 63.4%('20년<sup>†</sup>)
- 약 4.3억 명에 달하는 빠링호우(八零后: 80년 이후 출생자)와 지우링호우(九零后: '90년 이후 출생자) 세대의 소비계층은 소득 증가 등으로 중국 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 ※ 중국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51%로 성장하는 등 주력 소비자로 부상
- 2017년 전체 국민의 평균 실질소득상승률(7.3%)과 개인소비증가율(5.4%)이 물가상승률(1.6%)보다 3배 이상 높아 향후 소비 잠재력이 충분함.

□ 새로운 성장 동력인 서비스 산업의 질적 성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 도모

-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7년 51.6%로 확대됨. 정부는 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년) 동안 서비스업 성장을 적극 장려하며 2020년 동 비중을 56%까지 확대시킬 계획임.

<표 2>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1 차 산 업	9.3	9.1	8.9	8.5	7.9
2 차 산 업	44.0	43.1	40.9	39.9	40.5
3 차 산 업	46.7	47.8	50.2	51.6	51.6

자료: CEIC, 중국 국가통계국

- 중국 정부는 향후 의료·헬스케어·환경·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제경쟁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다. 정책성과

□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을 통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증대

- 정부는 2009년 3월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공식 발표한 이후 직거래 통화 확대, 역외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통화스왑협정 체결 대상국 및 규모 확대\* 등 위안화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 2016년 말 기준 36개 국가와 3.3조 위안 규모의 통화스왑 체결

- 2016년 2월 위안화는 세계 5위 결제통화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10월에는 달러와 유로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IMF의 특별인출권(SDR) 바스켓에 정식으로 편입됨.

<표 3> SDR 통화바스켓 구성비

단위: %

구 분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위안(¥)
기 준	41.90	37.40	11.30	9.40	-
'16.10 이후	41.73	30.93	8.09	8.33	10.92

자료: IMF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위안화는 세계 6대 결제 화폐로서 1.68%의 비중을 차지함.
  - 2016년 위안화 국제결제금액은 총 9.9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국제결제금액의 25.2%를 차지함. 위안화는 6년 연속 중국 제2의 국제결제 통화로서 자리매김 함.
-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연방준비위원회 및 러시아 중앙은행과 위안화 청산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6년 말까지 전 세계 23개 지역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을 설립함.
- 2018년 2월 미국의 투자은행(IB)인 JP모건체이스를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국제 직거래를 개시함. 한도 제한 없이 중국 위안화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채권 등의 매매가 가능함에 따라 중국의 금융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를 진전시킬 것으로 기대됨.

#### □ 대기·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 중국은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고,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대기·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에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베이징의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PM2.5지수 기준)는 WHO 일일 기준치의 15배인 300을 넘어서고 있으며, 2015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7,150억 달러(GDP의 6.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 '대기오염 방지법'을 15년 만에 개정하여 오염물 배출 총량과 허가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였고, 2017년에는 검측 및 감찰 수준을 제고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함.
  - \* 2017년 환경 관련 위법 적발건수가 23.3만건으로 2014년에 비해 180% 증가하였고, 2017년 부과된 벌금도 115.8억 위안으로 2014년 대비 265%나 증가하였음.
  - 각종 법규 제정 및 정책 시행으로 인해, 2017년 공기질량 기준을 충족한 도시는 전체 338개 도시 중 29.3%로서 2014년 10% 대비 상승함.

## 3. 대외경제

&lt;표 4&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sup>e</sup>	2018 <sup>f</sup>
경상수지	236,047	304,164	196,380	171,029	232,022
경상수지 / GDP	2.2	2.7	1.7	1.4	1.7
상품수지	435,041	576,191	494,078	476,129	549,470
수출	2,243,761	2,142,754	1,989,519	2,216,523	2,411,808
수입	1,808,720	1,566,563	1,495,441	1,740,394	1,862,338
외환보유액	3,859,168	3,345,194	3,029,775	3,158,877	3,097,972
총외채잔액	1,771,069	1,418,830	1,456,530	1,547,530	1,673,630
총외채잔액 / GDP	16.8	12.6	13.0	13.1	13.0
D. S. R.	6.5	7.9	7.9	8.3	8.5

자료: IMF, EIU, CEIC, OECD.

## □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은 감소 추세

- 중국은 풍부한 저임노동력과 탄탄한 제조업 기반에 힘입어 대규모 상품 및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입이 동반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2017년에는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 등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됨.
- 2017년에도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무역흑자 감소 및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4%로 2016년 1.7% 대비 하락하였음.

## □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되나,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은 유지

- 외환보유액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위안화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환 매입에 힘입어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2014년 6월 기준 4조 달러에 육박한바 있음.
- 그러나 2015년 이후 증시 급락,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및 미국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로 2016년까지는 외환보유액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7년 말 기준 3조 달러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의 자본유출 통제와 외환유입 조치로 2018년에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 안정적인 외채수준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 시현

- 2017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3.1%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3%로 양호한 수준임.
- 중국 외환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28.9% 수준으로 안정적인 외채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동향

#### □ 더욱 강력한 시진핑 1인 체제 아래 집권 2기 공식 출범

- 2018년 3월 국가 주석에 재선출 되어 공식적으로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후 줄곧 실시한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기반으로 하여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으며, 1인 지도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 주석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론적으로 종신적인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이후 지속되어 왔던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키고 1인 지배 체제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부주석(왕치산) 및 경제부총리(류허)도 자신의 최측근으로 임명함. 왕치산 부주석은 외교를 총괄하고, 류허 부총리는 경제·통화·금융 정책을 총괄하며 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0월 25일 제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집권 2기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 새로 임명되었음.
  -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 5명 중 3명(리잔수, 왕후닝, 자오러지)이 시진핑 측근이고 대부분 반부패·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바, 국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이 확립되었음.

## 2. 사회동향

### □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에 따른 사회불안 요소 존재

- 2015년 10월 신장 자치구 선포 6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위구르족 분리주의자들이 탄광을 습격하여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테러 위협이 끊이지 않음.
  - 이에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 내 '테러·분리주의·종교 극단주의'를 근절하기 위하여 종교 활동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음.
- 최근의 분리·독립운동은 다소 약화된 상태이지만, 티베트 또는 신장 지역의 소수민족지역에서 경우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의 테러 위협은 상존함.
  - 티베트 지역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은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라마 14세 (1935년생)가 사망할 경우 격렬해 질 가능성이 있음.

### □ 소득 불균형에 따른 대도시 인구집중 및 호구제도로 인한 농민공 문제 부각

- 2017년 기준 도시지역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36,396위안)은 농촌지역 (13,432위안)의 2.7배 수준임.
  - 2017년 도시지역 평균 수입이 33,834위안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으며, 농촌지역 평균수입은 13,432위안으로 전년대비 8.6%를 성장하였으나 도시와 농촌간의 수입의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임.
- 이러한 소득격차로 인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중국의 빈곤층 노동자를 일컫는 '농민공' 이 발생하게 됨. 중국내 주요 도시는 농민공에게 호적을 부여하지 않아 농민공들은 교육·의료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부모와 떨어져 홀로 농촌에 남겨진 아동 및 엄격한 호적제도로 인해 도시에 입적하지 못한 농민공의 자녀들이 약 1억 명 정도임.
- 노동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농민공들이 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도시민으로 편입하지 못한 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고, 이들 아동 중 일부는 탈선하여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3. 국제관계

####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따른 미·중 무역 분쟁 심화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제조업 기반 약화 및 일자리 감소는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미국의 최대 상품교역국(수출3위, 수입1위)으로서 對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기준 -3,752억 달러 규모로 전체(-7,961억 달러)의 약 50%를 차지함.
- 미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다각적인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국가안보위협을 근거로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 중국은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고,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조치는 다자무역체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은 대부분 민간에서 사용되는 중·저급품으로 미국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함.
  - 미국은 일정 조건\* 충족 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여, 금번 조치의 주된 목적이 反中 동맹 결성을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임을 밝히고 있음.
- \* ① G20 철강포럼서 미국 입장 지지, ②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동대응, ③ WTO에 중국을 제소할 경우 공동보조. ④ 對美수출, 2017년 수준으로 억제, ⑤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 미국의 대중 무역불균형 개선 조치는 2018년 11월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일대일로 사업 본격화

-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신(新) 실크로드) 사업을 통해 중앙 아시아, 동남아 등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였고, 6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협력 의사를 밝히며 아·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함.
  - \* 재원 조달을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2016년 1월 57개국(역내 37개국, 역외 20개국)을 창립 멤버로 공식 출범함.
  - 2017년말 기준 AIIB 이사회는 파키스탄 고속도로 및 수력발전소 건설, 우즈베키스탄 국경 도로 개선 등 총 23건의 사업을 승인함.

-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한 중국의 인프라 건설 투자에 대해 대부분 국가에서는 긍정적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과의 불균형적 관계 수립을 우려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이로 인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음.

####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갈등 가능성 상존

-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노선 입장이며, 에너지안보 강화, 해상교역 거점 확보, 해상기지 건설 등을 이유로 남중국해에서의 해상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과 베트남은 해상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극심하게 대립해 왔음.
  - 특히 중국은 베트남과의 분쟁 해역에서 석유탐사를 개시('14.5월)하고, 해군이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의 시추선 케이블을 절단('15.5월)하고, 군사 위협을 가해 베트남의 자원탐사를 중단('17.7월)시키는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베트남의 반중 정서가 확대됨.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대외순자산에 힘입은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 2014년~2016년 외환보유액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다 외환보유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총 외채는 GDP 대비 약 13%에 불과함.
  - 2018년 1월 기준 3조 1,615억 달러를 기록해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6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2017년 9월말 기준 대외순자산이 1.7조 달러로 GDP 대비 14%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임을 감안 시 외채상환태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2. 국제시장평가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	(2017. 6)	2등급	(2016. 6)
Moody's*	A1	(2017. 5)	Aa3	(2016. 3)
Fitch	A+	(2017. 7)	A+	(2016.11)

\* 경제 및 금융시스템 개혁조치 시행효과가 제한적이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부채 증가세 지속이 금융안정성을 저해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 단계 하향 조정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 8. 24. 수교 (북한과는 1949. 10. 6. 수교)
- 주요협정: 무역협정('92), 투자보장협정('92), 과학기술협력협정('92), 이중과세방지협정('94), 형사사법공조조약('00),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05), 투자증진보호협정('07), 사회보험협정('13), 기후변화협력협정('15), 영사협정('15), 자유무역협정('15)
-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7년 말 기준 26,846건, 59,638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 o 중국은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서,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4.8%, 수입의 20.5%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양국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표 6> 한·중국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45,288	137,124	124,433	142,120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수 입	90,082	90,250	86,962	97,860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교역규모	235,370	227,374	211,395	239,980	-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 의견

- 중국은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함. 2015년에 ‘바오치(保七: 7%대 경제성장)’가 무너지긴 하였지만, 중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 시진핑 정부는 반부패 운동으로 부패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어 강력한 권력기반을 유지해 왔고, 2018년 3월 헌법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7년 13.1%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8.3%로 낮은 수준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 지속,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아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을 위한 질적 경제 성장 실현을 위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농촌간 소득격차 완화, 환경오염 해결 등 내실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책임조사역 이자호 (☎02-6255-5705)

E-mail: leejaho@koreaexim.go.kr